

경찰청장 “백남기, 초기 상황속보 파기”

김정우 “사건 후 조치사항 법원 제출 답변서 위증처리해 달라”... 박남춘 “문서 파기 법적 근거 대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사건 당시 살수차 운용지침 준수 여부, 부검 명장 논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왜 백남기씨 사체가 민중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원인은 경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방법과 절차가 맞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가 쓰러졌을 때의 조치와 대응이 잘못됐다”며 “경찰 수뇌부는 사과하

고 위로방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김 의원 질의에 “고 의든 과실이든 경찰이 책임질 부분은 있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원망스럽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경찰의 경고 살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당시 광주 11호차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경고살수가 없었는데 경찰청이 언론 대응할 때는 4초간 경고살수가 있었다고 했다”며 “관련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없다”고 답변해 국감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어 더민주 김정우 의원 질의에서는 이 청장이 백씨 사건 초기 상황속보를 파기했다고 밝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이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하자 이 청장은 “보통 상황속보는 보고 이후 폐기한다”며 관련 보고서가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 제출 답변서에, 경찰청이 백씨 사건 후 조치사항에 대해 30분 단위로 제출되는 상황속보 1보부터 20보까지 제출한 것으로 돼있는데, 어제 밤에는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이것은 위증이다. 여야 간사 합의로 위증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도 “경찰은 세금 몇십억원씩

들여 채증장비를 마련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경찰이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무전 녹취록도 없고 어떤 법적 근거로 문서를 파기했는지 근거를 대라”고 따졌으나, 이 청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더민주 이재정 의원 역시 “증거인멸”이라고 거듭했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경찰청에 “파기 근거, 또는 내부 규정을 아랑에 제출하라”며 “해당 국적이 추후 설명하라”고 조치했다.

이날 이 청장은 종전 경찰 수뇌부는 달리 백씨 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과 함께라면 조문을 가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특혜 논란 지적도 이어졌다. /뉴시스

“위법한 물대포로 부상” 법원 판결에도 진선미 “경찰 관련자 징계 전무”

법원이 위법한 물대포 살수로 참가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경찰은 관련자를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29일 서울중앙지법은 30여분간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각각 외상성 고막전공,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박·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당시 살수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며 각각 120만원,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경찰은 (살수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물대포 발사 전 집회 참가자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판결 이후에도 해당자에 대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특히 집회사위 과잉집압에 대한 경찰 내부의 징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집회사위 관련 징계현황(2012년~2016년 6월)’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집회사위 관련으로 징계 받은 경찰은 감봉 2명, 견책 1명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감봉 2건은 2012년 경기 안산 소재 SM공장에서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신고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건이다.

진 의원은 “경찰이 걸로로는 인권·안전을 보장하는 집회관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집회 과잉집압을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정권교체 넘어 경제교체 해야”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 기조연설 “성장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내년 대선과 관련,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지만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성장의 소장 조운제(왼쪽부터) 서경대 교수, 자문위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상임고문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이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성장의 개념에 관해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한다”며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전통시장·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려면 성장으로 생기는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부채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해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제분야 공약으로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

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속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단기 개편방안 올해 안 실행, 난임시술 지원 전 국민으로 확대, 아동수당 도입, 신혼부부 반값임대주택 제공,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국민연금기금 일부 투자,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박주민 “검찰, 개까지 죽여가며 항고이유서 작성”

익산 약촌오거리 재심 사건과 관련,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찰이 개를 죽여 실험한 감정서를 항고이유서에 첨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6일 오후 광주지검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고검 및 대전지·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2)씨가 15살이던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1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최씨는 같은 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자 격분,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수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역을 마친 최씨는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재심을 결정했다. 이후 광주고검이 항고·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진범을 숨겨주고 살해 도구인 칼을 보관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찰이 개를 죽여 감정한 뒤 이를 항고이유서에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본 건 감정을 위해 감정인은 개의 뒷다리(대퇴부) 위쪽을 면 티셔츠로 덮고 과도로 찔러보는 등의 실험을 시행했다’는 기록들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재심 결정이 나자 이를 막기 위해 개를 불법으로 죽인 내용의 감정서까지 첨부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어린이 행복동 군산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명품의회

군산시의의회!

군산시의의회